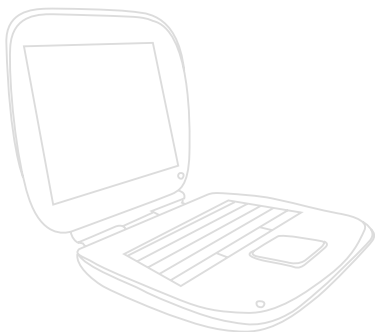




본지 김한웅 부장

한·미 FTA
육계산업 대책
제고돼야...
육계 사육 농가·
계열화업체
대정부 요구
적극 나서야...



최근 국내 농업계는 한·미 FTA 타결로 인한 대책(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해규모가 큰 축산업계의 경우 비장한 각오로 한·미 FTA타결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육계(닭고기)산업의 경우 여느 축종 보다 한·미 FTA에 대한 반대여론이 작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닭고기 산업이 처한 위치와 계열화 사업이 갖는 특성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정책 당국은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관세가 100% 철폐될 경우 표면상으로 드러난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가격하락과 생산하락에 대한 피해규모일 뿐 전체 닭고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다.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산업 자체가 비탄력적인 요소를 갖고 있어 수급조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나 닭고기 산업은 이 경우가 특히 심해 더욱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

산업이 갖는 특성상 육계는 사육기간이 짧아 출하시기 조절이 불가능한데다가 냉동비축에 들어갈 경우 원래 정상 가격의 30%이상 손해보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단 1%의 과잉생산에도 전체 육계가격 형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육계산업의 구조인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산출된 교차 탄성치에 의한 피해액 보다 몇 배에 달하는 피해규모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육계 계열화 사육비율을 2006년 기준 70% 정도로 관측하고 있으나 2002년 장기불황과 2003년도 AI발생 등으로 위협을 느낀 육계사육농가들이 대거 계약사육으로 돌아서 계열화 사육비중은 이미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농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피해정도가 계열화 업체에 의해 일차적으로 걸러져 육계사육농가들이 한·미 FTA 타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뿐이지 피해 정도가 미미해 조용히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더욱이 육계산업은 그동안 타 축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당국의 홀대를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과거 UR 협상이나 GATT 협상 체제 아래에서도 양계산물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미명아래 1차적인 희생양으로 내몰았던 전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한·미 FTA는 물론이고 앞으로 전개될 각 국과의 FTA에서도 더 이상 양계산물 시장을 무방비로 내어줄 수는 없다.

더욱이 육계산업의 경우 외부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매우 취약한 유통구조와 가격형성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닭고기 판매장에서는 닭고기가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미끼 상품으로 전략, 홍역을 치르고 있으며 이마저도 이전투구(泥田鬪狗)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사육시설 수준 또한 마찬가지다. 경쟁력을 가지고 육계를 사육할 수 있는 현대식 무창계사의 보유비율은 전체 농가수의 11~12%에 불과하다. 아직도 대다수의 농가들은 비닐하우스 계사에서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다.

이런 실상을 무시한 정부의 FTA 보완대책은 사실상 한낱 허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보완대책 중 '계열화 업체의 사육비율 확대'는 이미 앞에서도 밝혔듯이 80%를 넘어선 상황에서 무의미한 것이며 시장개방에 따른 책임을 계열주체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렵다.

계열화 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이 전무한 상태

에서 계열주체가 경영이 어려워져 넘어지면 그때 누가 책임을 질지 의문이다.

'사육단계 HACCP 도입으로 국산 가금육의 신뢰도 제고' 역시 마찬가지다. HACCP 인증을 받으면 좋고 현대화시설을 갖추면 좋은 것 모르는 농가가 있겠는가. 문제는 자금이다. HACCP를 받을 수 있는 5만수 규모의 계사 신축을 위해서는 개소당 7~8억의 자금이 소요된다. 무슨 방법으로 이러한 자금을 조달하라는 건지 이 또한 의문이다.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를 전체 도축작업장으로 확대하여 구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현재 도축실적으로 상위 5개 작업장에서 포장유통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지만 공장에서 출하 후 대리점으로 포장을 해포해 유통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전체 도계장으로 포장유통 의무화를 확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포장유통 의무화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수 십억원의 막대한 자금 소요가 불가피한데 이 역시 어디서 조달하라는 것인지...

결국 농가든, 계열주체든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메시지도 없는 것이다.

육계사육농가, 계열화 업체도 마찬가지다. 이제 양보가 미덕인 시대는 오래 전에 지나갔다.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다. 무엇이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내가 스스로 돕지 않으면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는 이치"이다. 